

놀라운 적중률, 점수가 나오는 선행정학 모의고사

2024 김종규 선행정학

ALLPASS 모의고사

지방·서울 9급

문제편

PREFACE

2024 올패스 선행정학 모의고사 지방·서울9급을 펴내며

5년 전에 더욱 새로워진 디자인과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였던 올패스 선행정학이 올해에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마다 행정학이 출제경향이나 난이도 면에서 시험 종류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년 전까지는 9급과 7급,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분하지 않고 동형모의고사 교재를 단권으로 출간하다 보니, 교재 분량도 많아지고 출제경향이나 난이도 면에서 시험종류별로 적합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 카스퍼(김중규 행정학 아카데미)에서는 2019년부터 올패스 선행정학 동형모의고사집을 시험대상에 적합하게 다양화하여 시리즈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올해에도 2024 올패스 선행정학 두 번째 교재이자 2024 지방·서울9급 시험에 완벽하게 포커스를 맞춘 2024 올패스 선행정학 모의고사 지방·서울9급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2024 올패스 선행정학 모의고사 지방·서울9급의 특징은 ;

첫째, 철저히 2024 지방·서울 9급 시험에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맞추어 20회분 문제를 엄선하되, 인사혁신처 스타일의 문제 구성형식을 통일하였습니다.

둘째, 보다 많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금년에는 신경향 문제 2회분이 추가되어 문제 수가 총 22회분으로 늘어났으며, 가급적 국가9급 동형모의고사 문제와의 중복을 피했습니다.

셋째, 최근 법령개정사항(특히 「지방자치법」), 정부조직 개편내용 등을 반영한 새로운 문제들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의 문제도 개편내용에 맞게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행정학이 정형화된 기출문제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 응용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참신한 응용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구성비율을 보면 최근 지방·서울9급 기출문제 30% + 기출문제 변형 30% + 신경향 응용문제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2023년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단순암기형 문제보다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이번 모의고사집은 이해를 요하는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좀 더 높였습니다.

여섯째, 최근 시험장에 가면 늘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제를 접하면서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출제위원급 교수들의 최근 개정판 저서들을 참고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각종 행정학 이슈들을 중심으로 신경향의 문제를 구성하여 포함시켰습니다.

일곱째, 합격생 조교들의 사전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각 회별로 예상평균점수와 상위20% 점수를 제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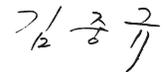
실전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접하게 될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며, 이 모의고사결과를 여러분들이 실제 수험장에서 받게될 성적표나 마찬가지로이니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한 문제 한 문제 공들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험은 기본이론 테스트도 아니고 단원별 문풀도 아닌 전 범위 동형문풀 점수로 말해주는 것이니만큼, 전범위 동형문풀 모의고사에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점행정학은 열정 있는 강의와 교재, 그리고 열정 있는 공부의 만남이 완성됩니다. 열정으로 만들어진 2024 올패스 선행정학 시리즈와 여러분들의 열정 있는 노력이 합쳐져 부디 만점행정학으로 이어지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정을 바친 시간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모쪼록 더욱 새로워진 2024 올패스 선행정학 모의고사 지방·서울9급으로 2024 지방·서울9급 시험에서 고득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25.
카스파 연구실에서 지은이



CONTENTS

PART

문제

제01회 모의고사	10	제18회 모의고사	112
제02회 모의고사	16	제19회 모의고사	118
제03회 모의고사	22	제20회 모의고사	124
제04회 모의고사	28	제21회 모의고사	130
제05회 모의고사	34	제22회 모의고사	136
제06회 모의고사	40		
제07회 모의고사	46		
제08회 모의고사	52		
제09회 모의고사	58		
제10회 모의고사	64		
제11회 모의고사	70		
제12회 모의고사	76		
제13회 모의고사	82		
제14회 모의고사	88		
제15회 모의고사	94		
제16회 모의고사	100		
제17회 모의고사	106		

2024년 6월 22일 시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정학

응시번호	
성명	

문제책형
가

【시험과목】

제1과목	국어	제2과목	영어	제3과목	한국사
제4과목	행정법	제5과목	행정학개론		

응시자 주의사항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답안지 책형 표기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와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제1회 모의고사

01 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그너(Wagner)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②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 ③ 보몰(Baumol)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④ 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02 비용편익분석(CBA)과 비용효과분석(CEA)에 대한 다음 비교·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비용편익분석은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 나. 비용편익분석은 양적인 분석에 주로 의존한다면 비용효과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요소 등 질적인 분석에 적합하다.
- 다. 비용편익분석은 단기적이고 좁은 안목의 분석이라면, 비용효과분석은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의 분석을 특징으로 한다.
- 라.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이 모두 가변적이지만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 중 하나만 가변적이다.
- 마. 비용편익분석은 분석결과를 사회전체 후생의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그렇지 못하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03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 ② 폐쇄형 충원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일반행정부 양성을 지향한다.
- ④ 탄력적 인사관리에 용이하다.

04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밀즈(Mills)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 ③ 달(Dahl)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한다.
- ④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이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1회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②	03	①	04	②	05	②
06	④	07	②	08	③	09	④	10	②
11	④	12	①	13	③	14	③	15	③
16	③	17	①	18	③	19	②	20	③

01 2024 선행정학 p.66 ④

파킨슨(Parkinson)이 아니라 **관료예산극대화가설을 주장한 니스칸넨(Niskanen)**이다. 파킨슨도 정부팽창을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본질적인 업무량에 관계 없이 관료들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한 반면, 니스칸넨은 관료가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팽창시켜 정부실패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 ☑ ① [○] 바그너(Wagner)는 경제성장,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의하여 정부 재정이 팽창한다는 국가경비 팽창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 ② [○] 피코크와 와이즈맨(Peacock & Wiseman)은 전쟁같은 위기 시에 재정이 급격히 팽창하고, 위기가 사라진 뒤에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위효과 또는 대체효과를 통하여 예산 팽창현상을 설명하였다.
- ③ [○] 보몰(Baumol)은 정부 부문은 민간 부문과 달리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여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성이 저하되고 생산비용은 빨리 증가하여 정부재정이 팽창한다고 주장하였다(보몰병 : Baumol Disease).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과 소 공급 설	Galbraith의 의존효과	공공재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 욕구를 자극 못함
	Duesenberry의 전시효과	민간재는 체면유지 때문에 실제 필요한 지출보다 더 많이 지출(과시효과)
	Musgrave의 조세저항	국민들의 조세저항(재정환상)이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유도(체감편익 < 체감비용)
	Downs의 합리적 무지	합리적 개인들은 공공재에 대해서 적극적 정보 수집을 하지 않음
과 다 공급 설	Wagner의 경비팽창의 법칙	국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 및 도시화에 의한 행정수요 팽창
	Peacock & Wiseman의 전위효과 · 대체효과	전쟁 등 위기시에 국민의 조세부담증대의 허용수준이 높아짐(공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체)
	보몰병(Baumol's Disease)	정부부문의 노동집약적인 성격으로 생산비용이 빨리 증가하는 현상(고정비용 < 변동비용)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자기부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예산 확보
	Buchanan의 리바이어던 가설	투표의 거래나 담합(log-rolling)에 의한 사업의 팽창
지출한도의 부재	중결장치 및 가시적인 길항력(拮抗力) 부재	

양출계입의 원리	지출수요에 따라 수입 확대
간접세 위주의 국가재정구조	조세저항이 회피되어 재정팽창

02 2024 선행정학 p.223 ②

다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올바른 지문이다.

- ☑ 가 [○] 비용편익분석은 비록 시장가격으로 조정된 그림자가격(잠재가격)이긴 하지만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비용효과 분석은 효과자체가 가격으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 나 [○]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하는 양적인 분석에 주로 의존한다면, 비용효과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요소 등 질적인 분석에 적합하다
- 다 [×] **반대이다.** 비용편익분석이 사회전체후생의 크기를 고려하는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의 분석이라면, 비용효과분석은 단기적이고 좁은 안목의 분석을 특징으로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관련된 요소들에 대하여 사회전반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주어진 특정문제나 특정대상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안목의 분석이다.
- 라 [○]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이 모두 가변적이지만(가변비용, 가변효과분석)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 중 하나만 가변적이다(고정비용, 고정효과분석). 고정비용분석은 비교대상 대안들의 비용이 같을 때 최대효과를 가져다주는 대안을 찾는 최대효과기준이고, 고정효과분석은 비교대상 대안들의 효과가 같을 때 최소비용인 대안을 찾는 최소비용기준이다.
- 마 [○] 비용편익분석은 분석결과를 사회전체 후생의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후생이란 사회총효용이나 비용을 금전적 가치로 표시한 것이다.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차이

비용편익분석(CBA)	비용효과분석(CEA)
비용 ·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	비용은 금전적 가치로, 편익은 금전 외의 산출물
가변비용, 가변효과의 분석에 사용	고정비용, 고정효과의 분석에 사용
양적 분석(공공부문 적용에 한계)	질적 분석(공공부문 적용에 적합)
형평성 ·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루지 못함	외부효과, 무형적 · 질적 가치분석에 적합
경제적 합리성(능률성) 강조	도구적 · 기술적 합리성(효과성) 강조
이질적 목표의 프로그램 간 비교	유사 · 동일 목표의 프로그램 간 비교

03 2024 선행정학 p.491 ①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는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이다.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와 달리 사람의 출신, 학력, 신분 등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주관적인 공직분류제도이다.

18

2024 선행정학 p.372 ④

★★

막스 베버는 관료제의 이념형을 가장 합리적이고 작업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 조직으로 설정하였으나, 일반적인 의미의 관료제의 의미는 이와 달리 매우 다의적이다. 즉,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 측면의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 ① [○] 베버는 관료제를 근대사회의 필연적 지배형식이라고 규정하고 근대 이전의 봉건적 조직원리와 근대사회의 조직원리를 구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률성이라고 지적하였다.
- ② [○] 근대적 관료제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군대나 기업조직 등 민간부문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 ③ [○] 막스 베버는 관료제의 이념형을 합리성의 극치를 이루는 조직으로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작업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 조직으로 설정하였다.

19

2024 선행정학 p.317 ④

★★

대규모 기능구조나 사업구조는 고객의 요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고객중심의 조직으로 적합하지 않다. 고객중심의 구조는 다양하고 복잡한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능이나 사업별로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내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경험 등을 고객중심으로 상호 통합한다.

- ☑ ① [○] 기능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통제를 통한 효율성을 지향할 때 적합한 조직으로 기계적구조의 하부조직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기계적 구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 사업구조는 사업별로 부서화한 뒤 각 사업부서내에는 기능별로 부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부서내에서 기능부서간 조정은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 ③ [○] 매트릭스구조는 환경적 압력이 있거나 부서간 상호의존성, 내부자원 활용에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대응성이 높은 조직이기 때문이다.

20

2024 선행정학 p.673 ①

★★

ㄱ, ㄴ은 맞고 ㄷ, ㄹ은 틀리다.

- ☑ ㄱ [○]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요구할 때는 필요한 이유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요구서에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 ㄴ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채무이행의 책임은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 ㄷ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의무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해당 연도의 지출이 필요할 때에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ㄹ [×] 반대이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출예산 · 계속비 ·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비교

	지출권한	용도	승인의 효력
세출예산	○ (승인)	제한 없음	1년
계속비	△ (잠정적)	제한 (공사 · 제조 · 연구)	5년 (국회의결시 연장 가능)
국고채무부담행위	× (미승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¹⁾

1) 채무이행의 책임은 행위를 승인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

TEST STATS

	9급	7급
난이도	상 중 하	상 중 하
예상 평균점수	68.2점	69.8점
상위 20% 예상점수	82.5점	85.4점

★★★

ㄱ, ㄴ만 틀리다.

- ☑ ㄱ [×] 반대이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항상 단식부기 = 현금주의, 발생주의 = 복식부기는 아니지만 단식부기와 현금주의가 결합되어 재정통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결합되어 재정성과 위주의 회계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ㄴ [○]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손익거래를 기록하지 않으므로 비용이나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ㄷ [○] 단식부기는 다양한 자산이 아니라 현금이라는 단일한 항목만을 기준으로 한쪽 면만 기장하는 방식이다.
- ㄹ [○] 복식부기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한다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장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내는 자기 검증기능이 있다.
- ㅁ [○] 예컨대 감가상각은 차변에서 비용의 증가로, 대변에서 자산의 감소로 처리된다.
- ㅂ [×] 반대이다. 발생주의에서는 현금주의가 인식하기 어려운 공무원 연금, 우발채무(보증채무 등) 등을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들은 미래의 비용으로 부채로 인식된다.

★★★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은 기술구조가 아니라 전문관료제가 중시하는 **핵심운영부문**이다.

- ☑ ① [○] 민츠버그(H. Mintzberg)는 개방체제하에서의 조직성장경로모형을 바탕으로 조직을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 중 임시특별조직(adhocracy)의 핵심구성부문이라 할 수 있는 지원 스태프 부문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외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② [○]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핵심 구성요소에 따라 조직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③ [○] 전략부문은 조직의 최고 정점에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최고 관리층으로서 소규모 신설조직인 단순구조의 핵심구성요소이다.

☑ Minzberg의 조직유형

구분	환경	규모	권한 (통제수단)	주요구성부문
단순구조	단순 · 동태적	소규모 신설조직	최고관리자에 집중(직접통제)	최고관리층 (전략부문)
기계 관료제	단순 · 안정적	대규모 조직	조직적 분화 (작업표준화)	기술구조
전문 관료제	복잡 · 안정적	중소규모 조직	수평적 분화 (기술표준화)	작업층 (핵심운영계층)
사업부제	단순 · 안정적	대규모 조직	하부단위 자율적 (산출표준화)	중간관리층
임시 특별조직	복잡 · 동태적	소규모 조직	수평적 분화 (상호조절)	지원참모 (지원스태프)

★★★

총액배분 · 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시적 · 하향적 예산이다.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주체는 "중앙부처"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인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다.

- ☑ ① [○] 거시적인 지출한도나 전략기획은 하향식으로 통제하고 미시적인 영역은 자율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 ③ [○] 재정당국에서 지출한도를 사전에 제시하고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 자금관리 등 미시적인 부분은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출한도 하달과 전략적 배분을 통해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정책평가논리모형이란 정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간의 핵심적인 논리적 인과관계 등을 기술하는 다이어그램이자 텍스트이다. 따라서 과정평가(형성평가)의 도구로 주로 활용되지만 정책프로그램의 중간성과나 목적달성여부를 보여줌으로써 정책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 ☑ ① [○] 정책평가논리모형은 정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간의 핵심적인 논리적 인과관계 등을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의 단계로 도식화시켜준다.
- ② [○] 산출(Output)은 집행이 종료된 후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물이고, 결과(Outcome)는 산출로 인하여 정책대상자에게 나타난 최종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 ④ [○] 정책평가 논리모형의 기능을 설명한 옳은 지문이다.

☑ 정책평가의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목표모형

	논리모형	목표모형
개념	프로그램의 논리적 인과경로 설정	정책목표의 달성도 평가
특징	형성(과정)평가의 일종	총괄(효과성)평가의 일종
시기	집행도중에 평가	집행완료 후 평가

☑ TEST STATS

	9급	7급
난이도	상 중 하	상 중 하
예상 평균점수	71.0점	72.8점
상위 20% 예상점수	88.7점	90.5점

18

2024 선행정학 p.593 ③

★★★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 중 초과수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므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이지만, c, m는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가 아니다.

- ☑ c [×]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완전성 원칙(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서 제외되었다(2014.1.).
-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되는 법정외예산이므로 원래 예산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는 아니다.

19

2024 선행정학 p.852 ④

★★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20

2024 선행정학 p.775 ③

★★★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제도는 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들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 ☑ ① [○]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 ② [○] 자치단체 간 경계변경 조정 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정권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 ④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내용(2022.1.13. 시행)

내용	개정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자율화	일률적인 기관대립형 ⇨ 기관구성형태(단체장 선임방법 등 포함)를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 비경합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 기초단체 우선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 자기 책임하에 종합처리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규정 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 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삭제됨
주민조례개폐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법적 근거만 남기고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주민조례발안법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도입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청구연령	19세 ⇨ 18세 이상 주민
	연대서명 인원 축소	다음 인원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도 : 500 ⇨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300 ⇨ 2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200 ⇨ 150명
	청구시효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 3년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 사건 독립 및 의회 운영의 자율화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함 지방의회 의안 발의요건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단체장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지방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	
중앙과 지방간 협력 강화	국가와 지방간 협력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둬(의장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단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초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 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특례시(인구100만)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①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존 특례 뿐 아니라 ②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특례 인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 특례는 법률로 정함 ⇨ 지방분권법(부시장 2인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설치규정 마련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함 ②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자치단체장직 인수위 설치규정 마련	① 위원장 1인 포함, 시·도는 20인, 시·군·구는 15인 이내 ② 당선일부터 임기 개시후 20일까지 활동 가능	

☑ TEST STATS

	9급	7급
난이도	상 중 하	상 중 하
예상 평균점수	72.0점	76.7점
상위 20% 예상점수	90.5점	92.1점

대 / 한 / 민 / 국 / 대 / 표 / 행 / 정 / 학

행정학의

선을 또한번 새롭게 긋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gong.conects.com
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4년 3월 29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